

포스트맑스주의의 반동적본질

변 금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좌우경기회주의는 노동운동내에 나타난 부르쵸아 및 소부르쵸아사상입니다.》

(《김일성전집》 제37권 247페이지)

1970년대에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포스트맑스주의는 1990년대초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를 기회로 여러 나라들에 퍼졌다.

포스트란 단어는 시간적으로는 차후를 의미하며 공간적으로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 포스트맑스주의는 후기맑스주의, 맑스주의를 부정하는 맑스주의, 새롭게 변한 맑스주의 등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되고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어떻든 그것들은 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반대하며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포스트맑스주의는 후기산업사회 즉 서유럽의 발전된 《정보사회》에서는 맑스주의를 비롯한 노동계급의 혁명리론이 통하지 않으며 새로운 《리론》이 나와야 한다는 구실밑에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전면부정하는 변색된 개량주의이다.

포스트맑스주의의 대표자들로서는 영국의 라클라우와 무페이다.

포스트맑스주의는 그 개량주의적성격의 악랄성과 교활성으로 하여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잠먹고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을 가로막는 최대의 정신적마약으로 되고있다.

포스트맑스주의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먼저 노동계급의 령도권과 노동계급의 전위당리론을 극력 부인하고있는것이다.

포스트맑스주의에서는 령도권개념이 출발적범주로 되고있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령도권개념을 리용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맑스주의가 밝힌 노동계급의 령도권을 부정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할것을 공공연히 주장하고있다.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령도권을 부정하기 위하여 《복합주체론》(일명 《다원적주체론》)을 들고나왔다.

그들은 《주체》라는 표현을 《사회적행위의 담당자》라는 단순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사회의 소집단, 개별적인 구락부, 일시적인 운동단체 등에 마구 쓰고있다.

포스트맑스주의에 의하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계급, 계층과 함께 다양한 소집단 그리고 성, 인종, 민족 등도 각각 하나의 《사회적주체》로 된다. 따라서 《복합주체》란 노동자, 지식노동자, 반실업자, 녀성, 인종 등의 기계적, 우연적인 집합체이다.

라클라우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행위자》(소집단)는 각각 하나의 《주체》를 이루므로 맑스주의의 계급량극화(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중심표본》을 주장하는것은 아무런 객관적리유도 서지 않는다는것이다.

그에 의하면 서유럽의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육체노동자가 수적으로 줄어들고 지식노동자가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중산계

급》으로 되었으므로 더이상 계급양극화의 경향도, 노동계급을 령도계급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모든 《사회적주체》들의 《동격현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맑스주의는 이제 더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기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는것이다.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이 서유럽자본주의의 본질과 기본모순을 외면하고 제나름대로 규정한 《사회적주체》들의 다양화와 그 기계적결합방식으로서의 《복합주체》를 운운하는것은 그들이야말로 부르조아지들에게 리롭게 현실을 외곡하는 우경기회주의자들이라는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사이의 적대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과 그들을 억압하는 자본가계급은 계급적리해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따라서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이 벌어지는것은 필연적이다.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이 교묘하게도 착취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계급개념을 떠나 《여러 사회적주체》들의 《동격현대》로 외곡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로자간의 계급투쟁, 노동계급의 령도권을 부정하기 위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의식화, 조직화될 때에만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력량으로 자라나며 혁명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이 떠벌이는 《복합주체론》은 결국 노동계급의 령도권과 노동계급의 당에 의한 계급투쟁론을 부정하기 위한 꾀변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실지로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은 《복합주체론》을 떠들면서 노동계급의 전위당리론을 한 사코 반대해나서고있다. 그들은 레닌의 전위당리론이 맑스주의의 《계급투쟁일면성》, 《노동계급중심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위한 방안으로 나왔는데 오늘 정보사회의 조건에서는 《사회적운동의 주체》가 다원화되었기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그들에 의하면 《복합주체》, 《다원적주체》가 기정현실로 된 조건에서는 노동계급이 《운동의 주체》를 대표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전위부대인 그 당은 계급적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원화된 주체》를 령도할수 없다는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포스트맑스주의의 극우익개량주의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령도권과 전위당에 의한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정면에서 부정하면서 거기에 《온화한 의회투쟁》을 대치시키고있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서유럽의 《의회민주주의정통사회》에서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맑스주의의 《계급성》개념은 포기되어야 하며 그대신 《의회로선》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이 《과격한 무장투쟁》대신 《온화한 의회투쟁》을 설교하는것은 결국 부르조아정권에 묵묵히 순종하라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력사는 그 어떤 착취계급도 국회의석의 확대에 의한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저들의 정권을 양보한 례가 없다는것을 증시하여주고있다.

이처럼 포스트맑스주의는 《복합주체론》을 근거로 노동계급의 령도권과 전위당에 의한 계급투쟁론을 극력 반대하고 허망한 《의회투쟁》을 극구 찬양하는 극우익개량주의사조이다.

포스트맑스주의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있는것이다.

포스트맑스주의는 《맑스주의는 계급적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서로 다른 민주주의만

이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차적인 인식》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주주의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 《민주주의확장》 다시말하여 《급진적민주주의》를 설교하고있다.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이 론하는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초계급적민주주의》, 《순수민주주의》이다. 다시말하여 그들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만인에 대한 민주주의》이다. 이것은 그들이 제창하는 《급진적민주주의》가 결국 부르조아민주주의의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띤다.

사회에는 두가지 형태의 민주주의만이 있을수 있다. 하나는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부르조아민주주의이다. 계급사회에서 《제3의 민주주의》, 《만인에 대한 민주주의》란 결코 있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맑스주의는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외면하고 《급진적민주주의》를 제창하면서 로동계급의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공공연히 부정하고있다.

포스트맑스주의는 맑스주의의 프로레타리아독재리론이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편협하고 외곡된 리해》이며 《민주주의》를 무조건 부정하기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프로레타리아독재리론은 로자간의 계급적적대관계에 기초한것으로서 서유럽의 현실과는 맞지 않을뿐아니라 그 《전체주의》적경향때문에 《민주주의》실현은 공상적일뿐이라는것이다.

포스트맑스주의의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의 관계를 외면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저들이 내놓은 《급진적민주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궤변이다.

력사는 계급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떠난 《순수민주주의》를 론하는것은 그자체가 벌써 개량주의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독재를 떠난 민주주의, 《순수민주주의》는 어제날 카우츠키를 비롯한 우경기회주의자들이 즐겨쓰던 개념이며 그것은 결국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한 투항주의적립장의 집중적표현이다.

오늘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이 《급진적민주주의》를 통한 《완전한 평등》, 《완전한 자유》의 실현을 운운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프로레타리아독재론을 거부함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계급투쟁에 떨쳐나설수 없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포스트맑스주의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신사회운동》을 사회변혁의 유일한 방도로 내세우고있는것이다.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은 서유럽자본주의를 계급사회가 아닌 《중산층화》가 실현된 《시민사회》로 미화분식하면서 《주체가 다원화》되어있는 객관적현실을 반영하는 운동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원래 《시민사회》란 봉건사회말기 신흥부르조아지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시장사회》, 부르조아지가 지배하는 상업적령역을 가리키는 뜻으로서 헤겔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포스트맑스주의에서 론하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이란 서유럽자본주의사회의 《도시주민》, 더 넓게는 《공민》전체를 말한다. 즉 《중산층화》가 실현된 서유럽자본주의나라 공

민을 의미하며 따라서 발전된 서유럽자본주의사회를 《시민사회》라고 하는것이다. 《시민운동》 역시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벌리는 초계급적대중운동을 의미하는것이다.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은 서유럽의 《시민사회》는 생산력의 《눈부신 발전》으로 계급, 계층의 구획이 없어진 《중산층화》가 실현된 사회이며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운 《사회적주체》들은 《급진적민주주의》를 실현할 과제를 안고있는바 그를 위한 유일한 방도는 《새로운 시민운동》 즉 《신사회운동》을 벌리는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결국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이 제창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신사회운동》의 궁극적목표가 계급투쟁을 통한 자본주의제도의 전복이 아니라 《급진적민주주의》가 실현된 자본주의의 옹호고수에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원래 《신사회운동》은 1960년대말에 신좌파운동의 영향밑에 각국의 《시민운동》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광범히 파급되었다. 그후 《신사회운동》은 《온화한 국회의석확보운동》은 물론 《생활환경보호운동》, 《반핵평화운동》, 《녀성운동》, 《청년운동》, 《생태주의운동》, 《도시사회운동》, 《지역운동》과 《지역분리운동》, 《반인종운동》 등의 부문운동으로 광범하게 전개되면서 1980년대에 정식 《신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은 《신사회운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서유럽자본주의사회에서의 《주체의 다원화》를 들고나오고있다. 그들에 의하면 서유럽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주체》가 《다원화》되었기때문에 사회운동은 마땅히 그들호상간 《동격련대》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회변혁의 기본형식이며 계급투쟁전략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적전략으로의 전환이라는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포스트맑스주의의 개량주의적성격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자본주의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서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계급투쟁을 떠나 《의회투쟁》과 《환경보호운동》과 같은 《신사회운동》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보는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궤변인것이다.

자본가계급은 저들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가져다주는 자본주의제도를 반혁명무력에 의거하여 지탱하고있으며 자기스스로 정권을 내놓은 부르쥬아지는 그 어느 자본주의력사에도 있어본적이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포스트맑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체제내에서의 개량화운동인 《신사회운동》으로 《사회변혁》을 이룩해보겠다고 하는것은 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포스트맑스주의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파악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제때에 철저히 분쇄해버려야 한다.